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대해

8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2~6면

전공의 파업

12면

중국 양회가
보여 준 것

7면

김진주의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서평

10~11면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군 공격 규탄한다

관련 기사 3면

바이든의 가자지구 임시 항구 건설 계획은 헛소리이자 위선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봉쇄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

소피 스콰이어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가자지구에 구호품 전달을 위한 임시 항구를 건설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학살에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또 다른 노력에 불과하다.”

3월 8일 금요일 ‘팔레스타인 민족 이니셔티브’의 지도자 무스타파 바르구티는 바이든의 계획을 이렇게 비판했다. “진정한 쟁점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또 다른 시도에 불과해 보입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에서 70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70만 명과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언론인 마르완 비샤라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바이든이 국정 연설에서 발표한 가자지구 임시 항구 건설 계획은, 가자지구의 고통을 끝내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아니라 보여주기, 여론 무마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난 7일 목요일 밤 국정 연설에서 바이든은 굶주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임시 항구를 가자지구에 건설하도록 미군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임시 항구를 건설해 구호품을 실은 선박이 해안가에 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중 투하되는 구호품들. 보잘것없는 구호 물자로 가자지구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바이든은 언제든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반입시킬 수 있다. 그냥 가자 국경에 발이 묶인 구호 트럭의 진입을 허용하라고 이스라엘에 요구하면 된다. 바이든이 말하는 항구를 지으려면 몇 주는 걸릴 것이다.

가자지구에 항구가 없는 것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지난 17년간 가자지구를 봉쇄하면서 항구 건설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지지했다.

바이든의 계획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지지를 거둬 들이는 게 아니다. 바이든이 이 항구가 임시 항구일 것임을 강조했다. 그 항구가 건설된다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호품 반입을 막을 수 있다. 이스라엘은 구호품을 배에 싣기 전에 검수할 권한을 계속 가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늘 그래 왔듯 “안보 상의 우려”라는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구

호품을 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영국도 이 사기극의 공범이다. 바이든의 국정 연설 이후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미국과 함께, 영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가자지구로 직행하는 바닷길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이 국정 연설을 한 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규모를 보여 주는 문서들에 관한 소식들이 보도됐다. 최근 기밀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를 100건 이상 판매했다. 그중 두 건에는 탱크 포탄 1억 600만 달러어치, 155mm 포탄 부품 1억 4750만 달러어치가 포함됐다. 바이든은 의회를 우회해 이를 승인했다.

바이든이 국정 연설을 하는 동안 코리 부시와 라시다 톨라립 민주당 의원

은 “폭탄 제공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바이든의 항구 건설 계획은 그가 압력을 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시작된 이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한 바이든의 공모에 반발해 거리 시위를 벌이고 정치인들에게 항의해 왔다.

최근 로이터·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투표층의 다수는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선호한다.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11월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비등비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군 공격이 이번 주 일요일(10일)에 시작될 수도 있다. 라파흐에 피란해 있는 15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라파흐 피란민 100만여 명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할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계획 없이 공격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스라엘이 라파흐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는 것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한 반감이 중동에서 반란을 촉발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협할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출처 Sophie Squire, 'Biden's Gaza port plan: hollow words and hypocrisy' (2024. 3. 8)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인 여성을 하루 평균 63명 살해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하루 평균 63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지적하는 새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 여성 9000명을 살해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수많은 시신들이 아직 건물

잔해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가자지구에서는 아이를 둔 여성이 매일 평균 37명 살해된다.

이스라엘은 구호 물자 반입을 막아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굶겨 죽이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여성이 훨씬 크다.

아이가 있는 여성 중 약 95퍼센트가

가족을 먹이기 위해 끼니를 거르기 일쑤라고 설문 조사에서 답했으며, 먹을 것을 구하려 쓰레기나 잔해를 뒤진다 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여성들은 생리용품을 구할 길이 거의 없어, 구할 수 있는 아무 천 쪼가리를 대신 써야 하는 처지다.

출처 Sophie Squire, 'Israel kills 63 women a day' (2024. 3. 5) / 번역 김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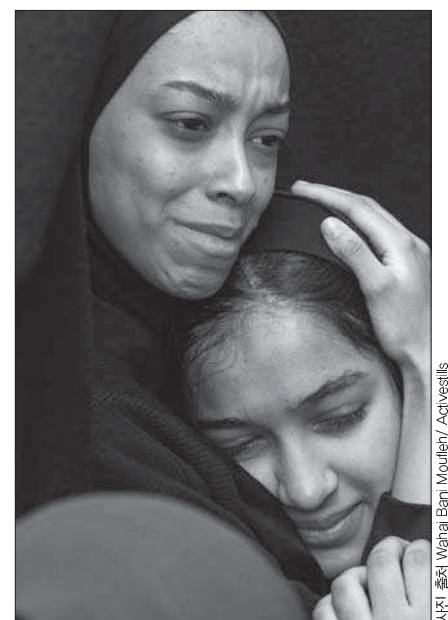


사진 출처 Wafaj Bani Moultar/ Activestills

이스라엘, 라파흐 지상군 공격 준비 중

구호품 받으려는 사람들 또 사살!

이스라엘은 교전 중지 협상 시도를 일축했고, 현재 가자지구 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이던 교전 중지 협상은 3월 7일 목요일(현지 시각)에 연기됐고 3월 셋째 주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설정한 데드라인인 10일 일요일이 지난 후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포로를 석방하지 않으면 라파흐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라파흐에는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엘발라에 살다가 라파흐로 피신한 이빛삼 씨는 이제 라파흐가 너무 위험해서 데이르엘발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다. 이빛삼 씨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특히 이빛삼 씨가 만삭의 몸인지라 더 그렇다고 <소셜리스트 위키>에 전했다.

“아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근처에 있는 알라와다 병원뿐이에요. 거기엔 데이르엘발라에서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그 병원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출산 예정일이 4월 3일이에요. 임신부들이 병원이 너무 멀거나 의료 지원이 너무 열악해서 죽는 경우를 수도룩하게 봤어요.”

3월 7일에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알발라드에 있는 모스크를 폭격해 최소 5명을 살해했다.

그보다 하루 전인 6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시대에 있는 나불시 교차로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사살했다. 이스라엘군은 “밀가루 학살”이 벌어졌던 바로 같은 장소에서 [또] 최소 두 명을 살해한 것이다. “밀가루 학살”은 2월 말에 이스라엘군이 나불시 교차로에서 155명을 살해하고 700명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을 말한다.(본지 495호, ‘구호 식량 받으려던 가자 주민 대학살: 구호품 받다 압사당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짓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차단한 바람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3월 7일 하루에만 팔레스타인인 최소 20명이 영양실조와 굶주림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에는 노인·장애인·어린이도 있다.

가자지구 북부에는 아직도 팔레스타



이스라엘은 피난민이 밀집한 라파흐로 지상군을 투입해 끔찍한 학살을 벌이려 한다

인인 약 30만 명이 살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이 지역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라파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가자지구 북부에서 노상 급식소를 차리는 일을 돕는 술레이마니 마루프 씨는 이렇게 전했다. “국제 사회는 인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이란 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저희 눈 앞에서 굶어 죽고 있어요.”

‘국제 사회’

자선 단체 ‘액션에이드’는 가자지구의 구호 체계가 “완전히 파탄 나기 일보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식량을 달라고, 폭격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주에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아이들은 “빵이 제 꿈이 됐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적힌 팻말을 들고 냄비를 두드리며 거리를 행진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가자지구의 참상에 대한 세계적인 분노를 의식하며 자기들도 이스라엘이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스라엘군 퇴역 장성이자 현 내각 성원인 베니 간츠와 가자지구 상황에 관해 “협약하지만 필요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캐머런은 자신이 라파흐 지상

군 침공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3월 7일에 몇몇 미국 관료들은 이스라엘이 라파흐를 공격할 때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미국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했다. “대통령 바이든과 고위급 참모

들은 미국산 무기 사용에 ‘조건’을 달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가 “극단적 조처”라고 표현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바이든은 살해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걱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 공격이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위협할 더 광범한 혼란을 촉발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진다. “바이든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군 공격] 계획이 선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탓에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면서 가자지구의 재앙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을 탄압할 최선의 방법을 두고 바이든과 네타냐후가 무슨 긴장을 빚든 간에, 서방은 중동에 있는 자신의 요새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맞선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srael attacks mosques and aid queues as it gears up for Rafah ground invasion’ (2024. 3. 7) / 번역 김준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26차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인종 학살 멈춰라 가자 봉쇄 해제하라

3월 16일(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정문 앞 인도
(광화문역 4번 출구 인근)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도심 행진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gmail.com
웹페이지 bit.ly/people-freepalestine
인스타그램 @people.freepalestine

제27차 집회·행진
3월 23일(토) 오후 2시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홍보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끓주림을 무기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사람들을 모욕하는 미국

김인식

마이클 파크리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3월 7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기아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크리는 이스라엘군이 심지어 어민들의 바다 접근을 막고 배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가자시대의 주요 항구에서 모든 배를 파괴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 7일 공격 이후 가자지구 어업 부문의 80퍼센트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식량 시스템을 고의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가자지구 거주자 4명 중 1명이 아사 직전이다. 기아와 탈수로 인한 영아와 유아와 아동 사망자수는 최악이다.

이스라엘이 구호 차량을 공격하는 것도 끓주림을 전쟁 도구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은 2월 29일 가족을 먹여 살릴 밀가루를 구호 트럭에서 어떻게든 구하려던 팔레스타인인들을 공격했다. 117명이 죽었고 750명이 부상당했다.

이스라엘은 압사 사고였다고 거짓말했다.

미국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가자 아이들이 끓주리는데, 미국은 공중 투하 쏘만 벌일 뿐이다

구해 줬다. 학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되자 미국은 반대했다.

2월 29일 대학살은 최악의 살상 행위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끓주린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스라엘군은 살아남기 위해 식료품 등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2월 29일 학살 사흘 뒤인 3월 3일 가자지구 남부 데이르 엘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은 구호품 배급 트럭을 또 공격해 적어도 9명이 죽었다.

이에 대한 세계적 공분이 확산되자 미국은 3월 2일과 5일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공중 투하했다.

팔레스타인 NGO 활동가들은 공중 투하가 사진 찍기에는 좋지만 구호품을 전달하는 데서는 형편없는 방식이

라고 비판한다.

공중 투하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극단적 조건에서 사용하는 최후의 구호 수단이다.

가자지구는 그런 곳이 아니다. 미국이 육로와 해상을 개방하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면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경 봉쇄로 팔레스타인인들이 기근에 시달리는데도 미국은 비행기에서 통조림을 떨어뜨리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구호품의 양도 가자지구 주민들의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수백 또는 수천 명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기다리지만 보통 10~20명만이 구호품을 손에 넣는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의 구호품 공중 투하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하찮은 조치다.

‘워싱턴 아랍 센터’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프로그램 책임자 유세프 무나이어는 바이든의 구호품 공중 투하를 이렇게 비판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방화범에게 기름을 주면서 물 한 컵 들고 5단계 화재 경보 현장에 나타난 것과 비슷하다.”(〈뉴욕 타임스〉 3월 8일 자)

한국 정부, 이스라엘의 새 정착촌 계획 철회 촉구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3월 9일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정착촌 확대는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라마단을 앞두고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저해[한다].”

앞서 3월 6일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는 서안지구 정착촌 3곳에 주택 3400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한 곳이다. 현재 서안지구에는 이스라엘인 약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 논평을 발표한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27일 유

엔 총회에서 채택된 “즉시 휴전” 결의안에 기권했다.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예멘 공습도 지지했다. 예멘 폭격이 “정당방위”라는 미국 등 서방 정부들의 공동 성명에 참여했다.

“이 와중에 ‘정착촌 또 짓겠다’ … ‘일촉즉발’ 중동의 화약고”라는 SBS 뉴스(3월 7일 자) 제목이 윤석열 정부의 “깊은 우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상황에서 서안지구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 아랍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미국과 아랍 정권들(이집

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스라엘의 계획을 즉시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들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중동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중동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매우 높다. 한국은 특히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다(80퍼센트).

중동의 불안정이 증대하면 한국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새 정착촌이 …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블링컨의 “국제법” 운운은 헛소리다.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 중단을 명령한 뒤, 유엔 안보리가 이 조치를 결의안으로 채택하려 하자 미국은 거부

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에 대해 미국은 다섯 차례나 반대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증설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줄곧 반대해 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새 정착촌 계획이 중동의 불안정을 키우고, 그 틈을 타 러시아·중국·이란 등 미국의 경쟁국들이 영향력을 키우게 될까 봐 이스라엘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를 잘 표현했다.

“미국의 중동 정책은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란, 러시아, 중국과 같은 야심 찬 패권국들이 이 지역을 지배할 힘을 얻거나 주요 경제에 대한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1월 30일 자)

기획 연재 팔레스타인, 저항, 혁명 — 해방을 향한 투쟁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① 이스라엘 건국, 팔레스타인의 재앙
- ②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시작되다
- ③ 오슬로 협정 이후 - 신자유주의 팔레스타인
- ④ 가자지구: 하마스의 부상
- ⑤ 제국주의의 경비군 이스라엘
- ⑥ 아랍 세계의 혁명과 반혁명
- ⑦ 유대인 혐오, 시온주의 반대, 좌파
- ⑧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봉기는 아랍 세계의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파업으로 경제의 주요 부문이 마비되면서 독재자가 몰락했다.

리비아의 벤가지에서 바레인의 마나마, 시리아의 홈스에서 예멘의 사나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명이 '민중은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혁명적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이 처음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그들은 대중 위원회를 설립하고, 집권당의 꼭두각시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파업을 조직하고, 독립 노조를 설립하고, 신문과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과 같은 소수 종교인들이 평등과 정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여성 억압에 도전하는 새로운 운동이 성장했다.

서방의 평론가들은 처음에는 당혹했다. 언론인과 학자들이 앞다투어 설명에 나섰다. 페이스북이 원인이었을까? 대중의 봉기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새로운 이슬람주의적 질서를 요구한 것일까?

혁명적 위기

지역 전체에 걸쳐 폭발적으로 일어난 혁명적 위기의 배경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는 지역 전체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국가 경제 정책이 변화하면서, 1945년 이후 반(反)식민주의 반란을 통해 등장한 민족주의 정권들을 점차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이들 정권의 대부분은 완전한 정치적 침묵을 대가로 고용 안정과 기본적인 복지 국가를 제공했고 다양한 반식



팔레스타인 해방의 길은 카이로로 통한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카이로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이집트인들

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식화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자, 지배계급은 지난 10여 년간의 빈약한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IMF 차관을 도입하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

둘째 핵심 요인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과 점령은 초강대국 미국의 치명적인 오판으로 판명났다.

미군은 수년간 이라크 반군과 싸우느라 수렁에 빠졌고, 혼란 속에서 등장한 이라크의 종파적 정권은 적어도 백악관의 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이웃 나라 이란의 영향력 하에도 놓여 있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점령을 유지하거나 동맹국의 쇠락하는 경제를 부양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더욱 줄어들었다.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쇠퇴하자 미국의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는 각자의 의제를 추구할 운신의 폭을 더 많이 갖게 됐고, 역내 국가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졌다.

아랍 혁명에서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내놓은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서로 갈마들자, 이 지역의 기성 지배계급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정권 반대 운동의 요구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조직 노동자를 비롯해 신자유주의

개혁의 직격탄을 맞아 온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당연하게도, 혁명의 승리로 가장 잃을 것이 많았던 자본 축적 중심지의 지배계급이 가장 먼저 반혁명에 나섰다.

예루살렘 해방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배자들은 여러 걸프 국가 지배계급의 지원을 받아 대중 봉기를 격퇴시키려는 전략의 중심에 섰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군사적 억압에 나설 뿐만 아니라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분쟁을 조장하여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분열시키는 방법도 결합시켰다.

이 전략이 가장 먼저 시험된 곳은 바레인이었다. 2011년 3월 16일 사우디 군대는 부패한 권위주의적 군주의 요청에 따라 대중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바레인을 침공했다.

사우디 지배계급은 이집트의 반혁명에도 뛰어들어 군부 정권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다. 그 군부 정권은 2013년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해 8월 무슬림형제단 단원들과 그 지지자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 자신이 반혁명을 주도했지만, 또 다른 지역 강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란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걸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

역 패권을 위한 싸움에는 종파적 색채가 가미됐다. 아사드 정권은 종파적 수니파 이슬람주의 단체들로부터 비(非)수니파 무슬림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자처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사드 정권이 시리아 혁명을 가장 강력히 지지한 지역들을 잔인하게 집단 처벌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 혁명이 종파 간 내전으로 변질된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그러나 걸프 국가들이 가장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수니파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지원하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투쟁은 이들 혁명의 정중앙을 관통했다. 튀니지의 시위대는 예루살렘 해방을 연호하며 벤 알리의 몰락을 기뻐했다. 이집트에서는 2011년 9월 수만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행진해 대사관을 폐쇄시켰다.

시리아에서는 다마스쿠스 난민 캠프에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에 몸을 던졌지만, 아사드가 난민 캠프를 포위해 복수를 감행하면서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반혁명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독립의 적들이 주도권을 되찾았다. 압둘팻타흐 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부 정권은 이집트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박해하고 하마스를 악마화하면서, 물품 반입에 사용되는 터널을 무너뜨리고 이집트 국경 쪽에 사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는 식으로 가자지구 포위망을 강화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떠오르는 차기 실권자로 널리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스라엘인들은 자기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뉴욕 타임스>가 설명하듯,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수십년간 공식적으로는 비난해 온 이스라엘을 향해 새롭게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경제적·지정학적 측면이 모두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보지 않고, 이 지역의 매력적인 경제 및 기술 중심지이자 사우디가 이란과 벌이는 냉전에서 잠재적 파트너로 여기게 됐다. 그런 관점 변화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어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한 뜻깊은 세계 여성의 날 집회·행진

3월 8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특별히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크나큰 재앙이다. 특히 많은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점령에 저항하고 있다.

바로 그런 팔레스타인 여성들에 대한 연대가 이날 집회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한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주도성이 두드러졌다.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쓰고 인증샷을 찍어 달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등 집회 시작 전 부스 행사에서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이밖에 팔레스타인 깃발 페이스 페인팅, 팔레스타인 관련 책 전시, 기념품 나눔 등 여러 사전 부스 행사가 열렸다.

사회를 맡은 팔레스타인 유학생 나리만 씨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집회의 시작을 힘차게 알렸다.

“Solidarity with Palestinian women!”(팔레스타인 여성들과 연대를!) 나리만 씨는 집회를 활기치게 이끌며 참가자들의 기세를 올렸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날 집회와 행진은 재한 팔레스타인 여성 유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처한 혹독한 현실을 얘기하며 연대를 호소했다.

“가자지구 여성들은 어떠한 권리도 없이 가장 끔찍한 억압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억압을 겪는 가자지구 여성들은 전 세계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의 연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야 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어서 나리만 씨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의 강인함을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런 온갖 어려움에도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회 연단에서는 가자지구의 17살 소녀 탈라가 보내 온 음성 메시지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숨죽인 채 탈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꿈, 일상, 건강 모두 파괴됐어요.

“깨끗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전염병은 퍼지는데 약도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밤에 배고파 울며 잠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가자지구에는 삶이 없습니다. 가자지구를 상대로 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위에 나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자지구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슬픔과 분노에 찬 참가자들은 나리만 씨의 선창에 따라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No More Chains, No More Fears! Free Free Palestine!”(“속박도 두려움도 이제 그만! 팔레스타인이여 독립하라!”)

인천의 중학교 교사인 조수진 씨는 가자지구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고통을 폭로했다.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여성 9000명을 살해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63명의 여성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여성들은 출산 과정에 필요한 의료 지원과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지난 달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반 여학생 두 명이 생리결석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에서처럼 생리대도 없이 아무 천

조각리를 써야 하는 처지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생리 용품을 구할 길 없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그것은 일상입니다.”

조수진 교사는 전국의 교사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교사들’을 꾸렸으며 연대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나심 씨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각 예술가들의 비디오 릴레이 프로젝트 하이파’에서 활동하는 이강선 씨는 팔레스타인의 여성 시인 파드와 뚜간의 시 ‘마지막 노트’를 각각 아랍어와 한국어로 낭송했다.

마지막 순서로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억압을 없애자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여성 참가자들이 무대 앞으로 나가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도심 행진

퍼포먼스를 마치자마자 행진이 시작됐다. 행진은 교보문고 앞에서 종로2가를 거쳐 이스라엘 대사관 앞까지 진행됐다.

팔레스타인 여성 유학생들이 번갈아 마이크를 잡고 구호를 선창하며 행진을 이끌었다.

▶ 7면으로 이어짐

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공자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양회의 관심사는 경제 정책이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나 될지,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리창 총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와 같은 5퍼센트 내외로 발표했지만, 경기부양책 발표는 없었다.

그러자 5퍼센트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지 의구심이 커졌다.

그리고 올해에도 중국 경제에 부동산 거품과 부채·디플레이 위기가 상존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2023년은 코로나19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 첫해였지만 기대했던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2퍼센트로 목표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이 거의 없어, 실제로 5.2퍼센트를 성장한 게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회복이 요원해 보인다. 홍콩 법원은 거대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와 비구이위안에 청산 명령을 내렸다. 물론 홍콩 법원의 결정이어서 대륙에 있는 두 그룹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작지 않다. 완다 그룹도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완다 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쇼핑몰 10곳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kremlin.ru

2024년 중국 양회는 디플레이션과 부채 위기 위험, 미중 경쟁 격화 등의 난제가 놓여 있음을 보여 줬다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해 이미 부동산 규제 완화, 신규 대출 확대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이번 양회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실 기업들을 도려내기도 힘든 정부의 처지를 드러낸다.

지방 정부들의 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1월 30일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계간 '거시 레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명목 GDP 대비 비금융 부문의 총부채 비율은 287.1퍼센트로, 그 전 해보다 13.5퍼센트 늘어났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자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그 전 해(1802억 달러)보다 81.7퍼센트 급감한 330억 달러에 그쳤다. 30년 만에 최저치다.

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 급감의 이유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봉쇄와 시진핑의 '반간첩법' 같은 권위주의적 통제 정책이 거론된다. 실제로 2018년 미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전체 FDI의 48퍼센트를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1퍼센트로 폭락했다. 같은 기간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지에 투자를 늘렸다.

중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도 대중국 투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다.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 인민은행은 성장 둔화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계속 인하했다. 이는 고금리를 유지한 미국과는 정반대 행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 급감의 핵심 요인은 바로 중국 경제의 부진인 듯하다. 지난해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그 전 해보다 0.4퍼센트 감소했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압박

이처럼 중국 국내의 경기 부진이 시진핑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도 더 강화되고 있다.

시진핑은 이에 대응해 첨단산업에 투자를 더 늘리려 한다. 외국인 투자가 줄고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정체하고 있지만(위에서 보았다), 국유 부문의 투자 비중은 계속 증대하고 있다. 미국과

의 경쟁을 위해 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AI 등 첨단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올해 양회는 국방 예산을 7.2퍼센트 증액해 1조 6655억 위안(약 308조 원)을 책정했다. 8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을 대폭 올려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력 증강만이 살 길이라는 중국 관료의 신념을 반영한다.

더욱이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을 표방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편, 경기 부진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임금 삭감과 노동 조건 악화는 물론이고 폐업이나 공장 이전에 따라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산당 정권은 경제 성장을 명분 삼아 억압적인 통치를 정당화했지만, 노동계급의 조건 악화로 그 정당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중국노동회보(China Labour Bulletin)에 따르면, 2023년 노동 쟁의가 1793건 발생했다. 2022년의 831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이미 279건 발생해, 지난해 동기(186건)보다 50퍼센트나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그 규모가 계속 증대돼 온 노동계급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노동운동의 중심인 광저우에서 노동 단체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지만, 코로나19 봉쇄가 끝난 뒤부터 다시 노동자 투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양안관계도 계속 긴장될 것이다.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아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찮게 벌어질 것이다.

올 한 해는 시진핑에게 "짜증 나는" 해가 될 것이다.

▶ 6면에서 이어짐

많은 여성 참가자들이 행진 대열 앞쪽에서 적극 나섰고, 매우 다양한 인종·국적의 남녀노소 300여 명이 행진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홍보물을 보고 온 대학생, 동남아시아계 여성 등 팔레스

타인 연대 집회에 처음 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평일 낮 집회였음에도 공무원·금속·공공·교사 등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휴가나 반차를 내고 참가했다.

활기찬 행진은 퇴근길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많았을 뿐 아니라, 행진에 합류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몇몇 외국인들은 종로 중앙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행진 대열을 발견하고 행진에 합류했다.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행진은 마무리됐다.

지금 이스라엘의 라파흐 지상군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공격으로 벌어질 참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최 측은 이후 계속될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에도 많이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익·이재혁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일각의 진보당 총선 지지 대상 배제 운동을 지지할 수 없다

혁명적 좌파는 자본주의하의 선거(와 특히 투표)를 대중 투쟁에 건위 부차적 문제로 본다. 지배계급 자신이 자체 내 경쟁을 위해 선거를 중시할 뿐, 노동계급 등 천대받는 사회집단들과 관련해서는 선거를 진실로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은 자신에게 편리하면 선거와 투표를 무시해 버릴 수도 있다. 2011년 11월 1일 파판드레우 당시 그리스 총리는 유럽중앙은행(ECB), IMF와 합의한 '구제금융 계획'(진실을 말하면,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자본가들, 언론,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등이 분통을 터뜨리며 격렬히 반발하는 바람에 이를 후 국민투표안을 철회했다. 파판드레우는 일주일 후에 물러나고, 선출되지 않은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 루카스 파파디모스가 신임 총리가 됐다.

또한 친자본주의 정치인들은 선거 공약 저버리기를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와 진보 성향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많은 공약 불이행을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친문계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대중을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 취급을 한다. 물론 국힘 정치인들이 거짓말과 약속 위반을 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주의하의 선거와 투표가 혁명가들에게 원칙 문제가 아니라 전술 문제임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1987년 이래로 많은 좌파들이 마치 민주당 투표 여부가 좌/우파를 나누는 근본 기준이라도 되는 양 열과 핏대를 올렸지만, 그들 중 적잖은 수가 민주당으로 가거나 심지어 국힘과 그 전신 정당으로 간 경우도 있다. 또는 민주당과 무비판적 동맹을 했던 일도 있다.(그랬다가 그런 "연대·연합"을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좌파 정치인과 정치 조직들도 있다.)

그러나 혁명적 좌파에게 선거와 투표는 원칙이 아니라 전술 문제로, 그 전술을 통해 광범한 대중이 싸울 자신이



지배계급과 우익 정당 국힘이 선거에서 패하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노동계급 진보(사회 개혁) 염원층에게 연대하기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있게 되고 사기가 오르게 되는 게 핵심적 주안점이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선거와 투표를 앞두고 후보 개인보다는 후보 주위에 결집한 정치 세력과 그 세력에 일정한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의 대중에게 주목한다.

전술 문제

물론 이들보다 더 좌파적이거나 투쟁적인 정치 세력과 대중이 선거에 나왔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연대해야 한다. 특별히 그런 '대중'(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종파적인 정치 조직(들)이 매우 소규모 지지에도 불구하고 좌파성이나 급진성, 투쟁성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총의 일부 좌파들은 지난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기초해, 그리고 몇몇 전임 위원장들을 앞세워 민주노총이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라고(그래서 "민주당 위성정당"에 투표해선 안 된다고) 요구하는 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연합은 이재명 말대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기는 해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점은 시민운

동과 민중운동의 많은 좌파적·반제국주의적 활동가들이 다수 참여한 조직이라는 점이다.

혁명가들은 당연히 이들의 민주당 관련 입장과 대책, 방침이 그릇됐다고 본다. 이들의 정치가 민주당이 설정한 수위 아래로 작용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 투쟁을 경제주의적·부문주의적 한계 안에서 지지하거나, 설사 정치적인 성격을 떨지라도 그 실제 효과는 선전·선동의 차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녹색정의당은 이와 다를 것인가? 심지어 노동당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우리는 이장우 노동당 후보가 외국인 노동자를 제한하자는 민족주의적 정책에 동의한 것을 비판했다. 사실 노동당은 급진 좌파에 속하기는 해도 역사적·국제적 라벨을 붙인다면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지, 혁명적 좌파 정당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당 지지 철회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들은 혁명적인가?

그럼에도 혁명적 기준에 따라 선거와 투표 방침을 제안하는 것은 과도한 좌익주의일 것이다.

우리는 현 시기에 걸맞은 선거·투

표 방침은 진보당을 배제하지 않고(녹색정의당이나 노동당은 물론 포함해) 범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권유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연합에 투표하는 것을 기피할 수 없다. 트로츠키는 1936년경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현대적 용어로 초계급적인 국민연합)을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인민전선에 투표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투표(선거 지지의 핵심) 방침을 해당 정치 조직의 노선이나 전략과 구분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연합의 강령이나 전략, 노선 등을 보고 그들을 지지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과 우익 정당 국힘에 맞서 그 정당 또는 정당연합(전선체)이 이기기를 기대하는 수많은 노동계급 진보(사회 개혁) 염원층에게 연대하기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결정보다 중요한 것은 훨씬 광범한 노동 대중의 염원과 행동이다.

관련 기사

4.10 총선을 앞두고
진보당의 더불어민주당
참여에 대해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피해자 지원하라”

3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전·경산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경산 지역에는 집주인 1명에 세입자가 여러 명인 다가구 피해자들이 많다. 다가구 피해자들은 근저당과 함께 여러 명의 전세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을 떠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매로 피해자들이 집을 떠나는 것이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의 골자인데, 다가구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을 취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다가구 주택은 정부가 양산한 것이다. 정부는 집주인 1명이 최대 19명의 세입자를 둘 수 있는 다가구 제도를 유지해 왔다. 게다가 다가구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는 세입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서 계약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하게 방치돼 왔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다가구 세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해 놓고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창식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전에는 300채 이상의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은 1채당 평균 10명으로 3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으로 지원받은 피해자는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특별법입니까? 심리 상담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원받는 게 지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3월 6일 용산 대통령실 앞 대전·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기자회견

원책입니까? 법률 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걸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뻔한 결과를 인지세, 송달액 지급해 가며 재차 확인하라는 것이 지원입니까? 아니면 20년간 임대인을 대신해 무이자로 [대출을] 갚으라는 것이 지원입니까?”

경산에서는 올해 2월 초에 피해자 대책위가 구성됐다. 대부분 다가구 피해자이고 학생과 청년들이 많다고 한다.

경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석진미 공동위원장은 대책위를 꾸리고 피해자 상담을 하며 돕고 있지만 “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고 말했다.

“다가구 피해의 경우 정부의 과실이 어느 유형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다가구 정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쓰러져 가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소한이라도 다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전세사기·강동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하정희 공동위원장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조차 반대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정치인들이 만든 법·제도 내에서 정당한 거래를 해서 사고가 생겼으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동산 개인 회사들이 망한 것에는 수십조 원을 들이면서 자기들이 [만든] 잘못된 제도 내에

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집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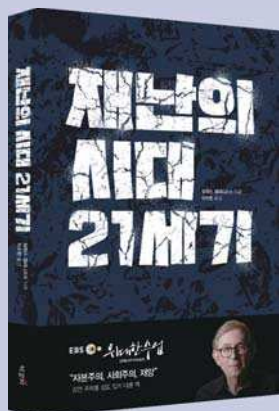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을 전액 날리게 된 피해자들이 최소한 30퍼센트의 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다. 물론 여전히 보증금을 대부분 날려야 해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안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특별법 개정안조차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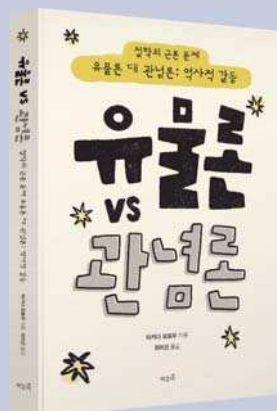
대전과 경산의 피해자들은 향후 지역에서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선영

신간 추천



재난의 시대 21세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이수현 옮김 | 416쪽
22,000원



철학의 근본 문제
유물론 대 관념론 —
역사적 갈등
타카다 모토무 지음
최미선 옮김 | 272쪽
15,000원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이정구 지음 | 232쪽
13,000원



서평 |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김진주 지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당찬 투쟁과 진정한 피해자 중심성

최미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부조리한 사법 절차를 몸소 겪고 그에 맞서 싸운 기록을 책으로 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경험하는 실제 현실을 생생히 전해 줄 뿐 아니라,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직접 분투한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주 씨는 본인이 피해자였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간과한 증거들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해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이 책에 생생히 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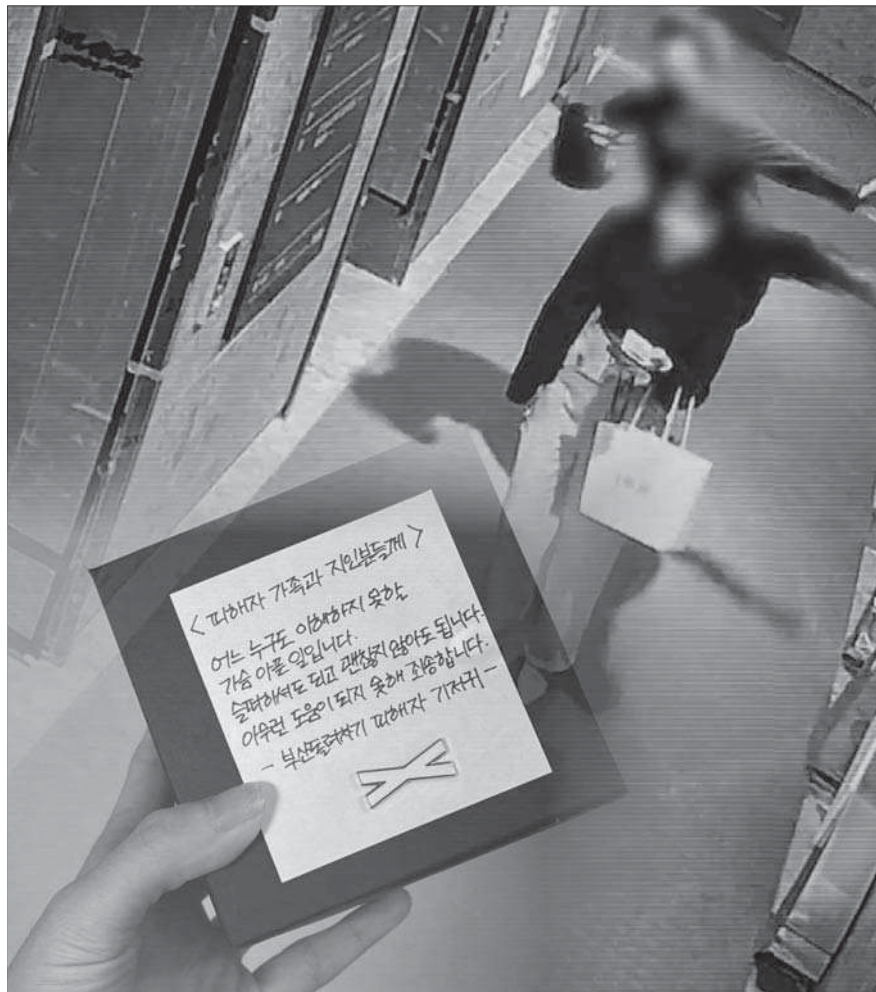
평범한 20대 여성 프리랜서 노동자인 그가 그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의 상황에서 이런 대단한 일을 어떤 ‘전문가’보다 훌륭하게 해 냈다는 사실이 경이롭다. 그 과정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투쟁 속에서 변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사법 시스템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들

김진주 씨가 범죄 피해자가 돼 경험한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는 빠져 있었다. 그의 말대로 “이 사건은 내가 없으면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지만, 그는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세요”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 했다. 그가 겪은 일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머리를 수차례 짓밟혀 사건 당시 기억을 잃고 실신한 김진주 씨는 간신히 깨어났으나 한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병원에서 지냈다. 당연히도 그는 도대체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도주 중이라는 범인이 보복하러 오지는 않을지, 잡히기는 한 건지 궁금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피해자의 처지와 안위에는 무관심했다. 신변 보호도, 수사상황에 대한 기본적 안내도 없었다. 범인이 도주 중이라는 사실과 이후 잡혔다는 소식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다. 김진주 씨의 말처럼 “이 시간 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김진주 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대하며 범죄 피해자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말라 죽는지 모르는 것”이다.

그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직장까지 잃었다. 아무 잘못 없는 범죄 피해자가 갑자기 생계 수단을 잃었지만 국가의 대책은 부재했다.

엄청난 병원비도 피해자가 감당해야 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있지만, 피해자가 병원비를 낸 뒤 복잡한 신청·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진짜 개털도 없는데 왜 바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건지 답답했다.” “[구조금] 신청하기도 전에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재판이 잡힌 후에도 피고인(가해자)의 정확한 혐의가 뭔지, 사건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검찰·법원 사이트에서도 사건 검색이 불가능했다. 뭐라도 알려면 재판에 참석해야 했지만, 재판 출석 시 피해자 보호 조처가 제공되지 않아 무방비 상태로 다녀야 했다.

심지어 김진주 씨는 첫 재판에 가서야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뿐 아니라 성범죄 의심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CCTV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7분의 공백 동안 성범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처음에 이에 대한 추가 감정 신청을 기각했지만, 진주 씨는 스스로 진실을 추적해 나갔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세요”

그러나 그는 거듭 여러 장벽에 가로막혔다. 사건 피해자로서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재판부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건 기록을 보려면 하는 수 없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형사소송 기록을 증거로 신청해야 했다. 단지 형사소송 기록을 보기 위해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민사소송을 치러야 하는 현실에 분통이 터졌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가해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가해자의 보복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알록소, 320쪽, 18,000원

그러나 온갖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김진주 씨는 의문점을 풀고자 발로 뛰었다. 범죄 관련 공부를 하고, 법정 견학을 가고, 사건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하고 제보자들과 접촉했다. 결국 진주 씨는 성범죄 혐의를 밝힐 DNA 재검증 허가를 이끌어 내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 가게 됐다.

김진주 씨는 본인의 소송이 끝난 뒤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대하며 범죄 피해자 처우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그 일환으로, 수사/재판/재판 후 과정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범죄 피해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짚으며 대안을 제시한다. 피해자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내용이어서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범죄 사건 피해자에 주목해야

이 책은 ‘피해자 중심주의’의 본래 취지를 상기시킨다. 원래 ‘피해자 중심주의’는 범죄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형사사법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사건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지만 정작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된다. 형사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법에 대한 침해로 보고 국가를 피해자로 인식하며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

자이므로 이런 접근법은 바뀌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기존 사법 절차에서 간과돼 온 피해자의 요구와 권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중시하고 관련 개선책을 제시해 왔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지 및 공판기록 열람·복사 등 알 권리 보장.
- 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석 지원 제도.
- 재판 시 피해자 진술권.
- 피해자 변호인 지원 제도.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신변 보호, 법률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심리적 치료) 등.

김진주 씨도 이와 비슷한 대안을 제시한다.

김진주 씨는 피해자 처우 개선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안을 직접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하고 공론화하는 등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몇몇 약속을 받아 내는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아직 갈 길이 멀다.

국가의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훌륭한 대안도 호지부지되거나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



김진주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피해자를구하자'의 한 장면 그가 겪은 일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부딪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준다

로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맞서는 투쟁도 필요할 것이다.

김진주 씨의 당부처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자.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 취지와 왜곡

앞서 살펴본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 취지는 한국 급진 페미니즘 일각에서 통용돼 온 '피해자 중심주의'와 다르다. 그간 한국 급진 페미니즘 일각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인식과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판단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지적한다. "[피해자 중심주의의 국제적 원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피해자 중심주의 즉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가해자의 말보다 신뢰해야 한다거나 성폭력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여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무죄가 되는 법리와는 거리가 있다."("미투 운동이 극복해야 할 피해자 중심주의", 《문학동네》2018년 여름 통권 95호)

이렇게 왜곡된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 주장의 검증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진상조사와 사실 확인, 당사자의 소명과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 '2차가해'로

모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종종 정치적 경쟁 상대나 이견자를 배척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됐다.

심지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나 성평등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우파 정치인들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이 개념을 위선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벌어진다.

이는 진실을 경시하게 만들고 꼭 필요한 논의마저 봉쇄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성폭력과 2차가해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다수도 왜곡된 '피해자 중심주의-2차가해' 규정과 그 적용에 회의감을 갖게 됐다.

이런 방식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의와 거리가 멀다.

한편, 우익들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형 집행 부활 등 엄벌주의를 추진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국가가 저지르는 또 다른 살인'으로 유엔도 폐지를 권고하는 불합리한 형벌이고, 흉악 범죄를 줄이지도 못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복수심을 충족시켜 줄 뿐이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가입하세요

QR Code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QR Code

탈레스탄인민들이여, 승리하라!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subs2

QR Code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QR Code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0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전공의 파업 4주차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등 취약층은 불안에 시달리고, 일부는 반강제로 2차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 윤석열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한다.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기자 지역 보건소 등에 배치했던 공보의를 대도시 병원에 투입하고 있다. 가뜰이나 취약한 지역 의료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압도 다수는 의사가 늘어야 한다고 여긴다. 지금대로라면 필수의료·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부 필수의료 분야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진료 시간도 지금보다 더 길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 당연한 조치에 반대해 파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능을 시장에 맡겨 둔 것이 근본 문제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설득할 명분이 없음을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거나, 오만하게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여기거나, 혹은 둘 다일 것이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노동계급의 일부 답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행동이 특별히 원성을 사는 이유다.

도덕주의적 비난과 공허한 대화는 도움 안 돼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분위기가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여겨 타협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강경 대응으로 대처하고 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수 천 명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형사 처벌 등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전공의들의 요구와 파업은 지지할 수 없지만, 좌파라면 윤석열 정부의 대안 없는 이런 대응을 지지해서도 안 된다. 전공의들의 요구가 노동자 등 서민층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점을 지

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생명’ 운운하며 도덕주의적 비난을 앞세우는 것은 부메랑이 될 뿐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선거에만 관심 있을 뿐, 노동자 등 서민층을 위한 의료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야 모두 의료 영리화와 시장화를 추구해 왔다.

지역 간 분과 간 의료 불균등 발전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시장을 규제하고 공공의료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만만치 않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벌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운동이 취약한 지금, 정부와 의료계 지도층과의 대화는 서민층을 위한 개선 효과는 거의 없고 정원 확대 규모 축소, 수가 인상 등 의사들과 병원, 정부만 이득을 챙기는 어정쩡한 절충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대화는 진정으로 진보적인 의료 개혁 의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노동계급 등 서민층에 불필요한 타협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들러리가 될 공산이 크다.

어처구니없게도 윤석열은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다시 만지작거리며 간호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병원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이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는 2차병원이 담당하게 하는 식으로 의료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들도 이를 ‘의료 개혁’이라며 받아쓰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는 의료 서비스 질의 하락일 뿐이다.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상당수가 빅5 등 대형병원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무지와 맹신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중소병원들과 의원이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그들도 돈벌이에 더 치중한다는 사실을 안다. 한국 의료 체계가 시장에 내맡겨진 채 불균등하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중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장 앞선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을 가는 게 의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2차병원으로 가라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시장화된 의료 체계에서는 과잉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이 공존한다. 바이오 의약품 등 큰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지만,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적인 부분에는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이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의료사고 면책?

전공의들의 또 다른 주요 요구는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요구다. 정부가 이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정책을 약속했지만, 더 폭넓은 면책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장애가 남았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의사-환자 간 정보 격차를 고려하

면 과실 여부의 조사가 의사와 병원 측에 유리한 조건과 인사들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의료인이 불합리하게 처벌받은 경우보다, 드러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은 의료 과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2018년 이대목동병원 신생

아 집단 사망 사건을 대표적인 ‘과잉 처벌’ 사례로 꼽는다. 해당 의료진은 최종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사들은 이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에 지망하는 전공의가 대폭 줄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의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그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무리 저체중아들이라도 신생아 네 명이 동시에 패혈증에 걸려 죽었는데, 균에 오염된 주사제가 원인이었다는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이든 관리부터 최종 행위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억지다.

이 사고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도 과장이다. 사고

▶ 13면으로 이어짐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흔히 기업 이윤을 우선하며 급격한 탄소 감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린플레이션을 과장하며 친환경 정책을 후퇴시켜야 하는 명분으로 삼는다. 또 핵발전처럼 환경에 재앙을 낳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고 있듯이 말이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심각한 재앙을 키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벌어진 각국 정부들의 ‘탈탄소 정책’은 (기후 재앙을 막는 데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세계적 물가 상승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재난의 시대 21세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20~2022년의 물가 급등은 대체로 두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는 팬데믹의 지속에 따른 노동시장과 공급 사슬의 교란인데, 봉쇄 조치로 소비 수요가 서비스에서 재화로 옮겨 간 것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둘째 요인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인데 (1) 그 원인은 각국 정부가 처음으로 ‘녹색 전환’을 향해 미미한 발걸음을 내딛고 석탄과 석유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도록 장려하면서 천연가스 공급 경쟁이 심화한 것이다. (2) 그리고 푸틴 정권이 에너지 공급자라는 러시아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한 것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격화시켰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환경 규제를 후퇴시켰다. 핵발전 공장을 시찰 중인 윤석열

천연가스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거의 4배로 치솟았다. 천연가스는 여전히 상당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를 배출함에도 ‘그린 에너지’라고 규정한 각국 정부들의 과장으로 수요가 커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며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세계적인 난방비 위기를 불렀고, 평범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2022년에는 석유 가격도 팬데믹 전에 비해 두 배가량으로 올랐다. 팬데믹 초반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공급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다.

후퇴

물가가 상승하자 각국 정부들은 약속했던 화석연료 규제 조치들을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이다. 바이든은 기후 위기 대처를 내세우던 말과 다르게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 미국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크게 늘렸다. 환경 파괴로 악명 높은 셰일 석유·가스를 포함해서 말이다.

바이든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이토록 중시하는 이유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물가 인상으로 불만이 높은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필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합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많은 부분을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을 떨어트리면 러시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조처조차 부족하다며 당선하면 파리 기후협약에서 다시 탈퇴하고 셰일 석유·가스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유전 개발과 함께 석탄 채굴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공급은 증가한 반면, 세계적으로 경기는 둔화해 최근 천연가스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향후에도 탄소 감축 정책이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터리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금속 등의 자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분야는 국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중요성이 커지는 자원을 국제적 패권 경쟁의 무기로 활용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성장하면 사태가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몇 년 전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해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듯이 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국가 간 패권 경쟁이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시켜 기후 재앙을 키울 뿐 아니라 물가 인상을 초래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고통에 빠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다.

진정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또 그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이 떠넘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시장의 이윤 논리와 국가 간 패권 경쟁에 기반한 사회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후 재앙을 막고, 물가 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 커져야 한다.

한편, 진보 진영 일각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탄소 배출 상품들의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약하며 감내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2022년에 유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클 때 정의당, 진보당은 유류세 인하 정책에 반대했던 바 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이는 체제의 피해자들인 대중의 고통을 외면해 기후 운동의 대중적 지지 기반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기후 재앙을 낳고 평범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체제에 맞서려면 노동계급 등의 대중적 투쟁을 키워 가야 한다.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고무하며 그런 투쟁이 기후 위기에 맞서게 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정선영

▶ 12면에서 이어짐

다음 해에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퍼센트가량 줄었는데, 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아 환자가 줄어든 것이 지원율 급감의 주된 이유였다.(2020년 74퍼센트 → 2021년 37.3퍼센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023년에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전공의의 84.3퍼센트는 저출산과 수가를 이유로 그 과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족한 인력,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 시

스템이 사고 위험을 키웠을 수 있다.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술이나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없어 한 행위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도 그 행위가 얼마나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다만, 인력이 충분하다면 그런 상황에 훨씬 덜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의 의사 수 증원 반대 주장은 인력 부족을 유지하라는 요구다. 그 요구는 의료의 사회적 필요보다 협소한 자기 미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다.



영화평 | <로기완>

탈북민 로기완을 통해 본 난민 신청자의 힘겨운 삶

영화 <로기완>(3월 1일 넷플릭스 공개)은 벨기에의 탈북 난민 신청자 로기완의 실화다. 조해진 작가의 소설 《로기완을 만났다》를 영화화했다.

로기완은 어머니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 연결에서 힘겹게 살아간다. 어머니는 공안 단속을 피하다 교통사고로 죽는다. 어머니는 기완 삼촌에게 자신의 시신을 팔라고 하고 그 돈으로 기완을 타국으로 떠나게 한다. “자기 이름을 얻고 살아남아라”라는 유언을 남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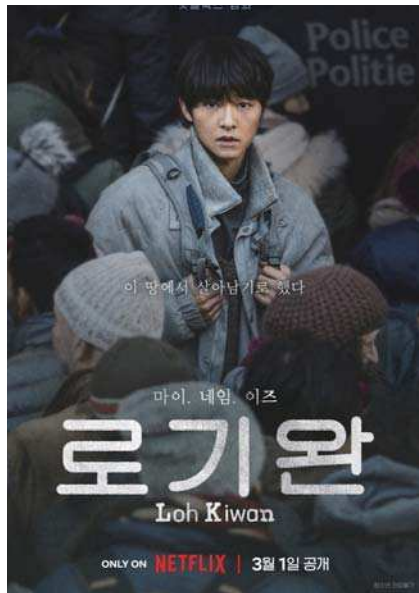
브뤼셀에 온 기완은 탈북민 신분으로 난민 신청을 한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벨기에 조사관은 로기완에게 돈 벌려고 온 조선족 아니냐는 차가운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임을 숨겨야 했던 로기완은 모든 증거를 얹어 버렸다. 어머니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 유일한 증거. 그는 두 번째 인터뷰 날짜를 받는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다음해 2월로.

난민 신청자 기완의 하루는 그야말로 인간 생존의 한계를 시험하는 나날들이었다. 어머니 유산의 상당 부분이 브로커에게 갔고 남은 650유로(약 100만 원)로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

휴지통에서 먹다 버린 빵을 찾아 먹고 빈 병을 팔아 손에 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지만, 유료 화장실이라 그조차 여의치 않고 어느 날에는 입구까지 봉쇄된다. 공원에서 불을 켜다가 한 무리의 청소년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한다.

원작 소설의 표현을 빌자면 “중립 평화의 도시” 브뤼셀도 자본주의의 차가운 도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기완은 어렵사리 축산 냉동 공장에서 임시직 일자리를 얻게 된다. 이 공장에서 알게 된 조선족 ‘누나’는 소위 경제 난민. 어린 자식들을 키워야 하



는 일이 만만치 않아 유럽으로 온 그녀는 기완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 동료들의 텃세도 막아 주고 된장도 퍼 준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난항을 거듭한다.

급기야 냉동 공장 경영진의 협박에 못 이겨 조선족 누나는 기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만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으로 돌아가 기완이 탈북민임을 입증할 연결 신문사의 ‘탈북의 모정’(로기완 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 낸다. 그 기사는 기완이 난민 지위를 얻는 데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영화는 난민 신청자의 마음을 닮듯한 시선으로 다룬다. 기완은 언제나 타인을 의식하고 경계하는 사람이지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다. 영화에서는 기완은 벨기에에서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국인 여성 마리(소설에서는 로기완의 같은 직장 동료였던 필리핀 여성)를 사랑하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난민 지위를 얻은 기



벨기에에서 난민 심사 인터뷰를 기다리는 로기완(송중기 분)

뿔도 잠시, 기완은 마리와 함께하기 위해 기꺼이 모로코로 향하고 난민 지위를 포기한다.(소설에서는 난민 보호소에 구급됐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필리핀 여성을 따라 런던으로 향한다.)

기완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존엄성이 기완에게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자유이기도 했던 것.

영화에서 기완의 마지막 멘트처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떠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떠나기 위해서는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이름을 얻고 자유롭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 영화의 감독(김희진)은 유럽에서 난민 지위를 받고자 애쓰는 실제 탈북

민들을 취재했다고 한다.

영화의 많은 장면이 한국의 난민 차별 현실과 겹쳐 보였다. 로기완은 전쟁과 기아, 정치적 탄압을 피해 온 내 친구 예멘 난민 압둘라이자 이집트 난민 알리다.

또한 영화는 경제 난민과 정치 난민을 칼같이 구분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난민 인정 시스템도 돌아보게 한다. 조선족 누나의 처지 또한 기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난민법 개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값지겠다.

김여진

영화 <로기완>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 59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여성과 이슬람

3월 20일(수) 오후 8시

발제 탈라트 아흐메드



인도계 영국인 마르크스주의자
에든버러대학교 남아시아역사 부교수
'인종차별에 맞서자' 스코틀랜드지부 소집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참가신청 bit.ly/0320-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슬람이 다른 종교에 비해 더 여성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의 하잡(머리 스카프) 착용이 여성 억압과 복종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좌파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무슬림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런 편견에 어떻게 답하고 맞서 싸울지는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이자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탈라트 아흐메드가 풍부한 식견과 경험으로 이에 답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돌봄 이주노동자 환영한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반대!

임준형

3월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되, 해당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돌봄 이주노동자 유입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주장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임을 회피하며 저임금 지급으로 때우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현행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테두리 안에서 돌봄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한다.

절반

첫째,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 방식으로 돌봄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런 고용 형태의 돌봄 노동자(“가사사용인”)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업종을 돌봄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구분 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내외국인 간 차별을 금지한 법률들을 피해 가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덜 쥐도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높다며 스스로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의 물가 수준에 맞는 생계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전월세 거주 1인 가구 생계비는 2022년 기준 월 241만여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여 원(시급 986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면 돌봄 이주노동자는 극도로 열악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을 4년간 취제한 책 《깎임 투쟁기》에 등장하는 한 캄보디아인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꼬집는다. “우리가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니까,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고요? 그럼... 세금도... 음식 값도, 버스 값도 절반만 낼게요. 그러면 될까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면 돌봄 이주노동자는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려 할 가능성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 산업연수제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 한때 이주노동자의 70~80퍼센트가 미등록이었을 정도다.

한국은행도 이 점을 우려해, 돌봄 이

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개별 가구나 기업에게 이주노동자가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용주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감시

이주노동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신분증 압수, 고의적 임금 체불 등 여러 인권침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지난해 12월 한신대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같은 일이 돌봄 이주노동자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개별 가구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이주노동자가 도망가지 않을지 항상 의심하고 감시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감시와 통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돌봄 이주노동자는 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추가적 재정 투입을 하

지 않고서 증가하는 돌봄 필요에 대응하고 기업들은 이주노동자를 저렴하게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가구가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돌봄서비스업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면 정부와 사용자들은 곧이어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결국 전반적인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돌봄서비스 비용이 떨어지는 대신 임금 상승이 억제되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 한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돼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돌봄서비스는 궁극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유지에 필요한 일이므로 그 혜택을 보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좌파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함 외면 말아야

한국은행이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자 여러 진보·좌파와 노동조합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돌봄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유입 자체를 반대하기도 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는 3월 6일 발표한 입장에서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고용할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에 앞장서 인력난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4년제 대학을 나온 외국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한국 취업 기회를 주려는 것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3월 7일 자성명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은 충분하다. 이들이 돌봄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봄 인력난이 야기되고 있는 것 [이다.]”

이런 주장들은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업난과 저임금은 이주노동자 탓이 아니다. 일자리와 임금 수준은 경제 상태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우느냐에 따

라 크게 좌우된다.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한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그런 일 자리에라도 취업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한국 노동조합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인 노동자들도 실업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로 돌리게 되기 쉽다. 그럴수록 사용자들의 속죄양 만들

고 이간질하기 전술에 취약해질 것이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면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특히, 노인 돌봄이나 간병의 경우 노동자 한 명당 돌보는 인원을 줄이고 임금 삭감 없이 충분한 휴식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은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고용되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



2004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

사진: 노동자 연대, 노동자

이주민·난민을 환영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퍼센트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에서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이 5퍼센트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도 이에 근접한 것이다.

그만큼 이주민이 한국 노동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한국 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

여러분이 신선 식품 배송을 시키면, 이주노동자가 재배한 식재료가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운송돼 집 앞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크다.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를 보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작물재배업에서 64퍼센트, 축산업에서 84퍼센트였다. 오직 이주노동자만 고용하고 있다는 농가도 각각 25퍼센트, 40퍼센트나 됐다.

‘지옥의 알바’로 불리는 물류 창고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활발한 분야의 하나로, 이주노동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유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한다. (‘외국인 비합법 노동시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원자재를 소재나 부품으로 가공하는 기초공정 산업)과 일부 지역의 산업을 이주노동자가 지탱한 지는 오래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애초 3년이었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체류 기한을 일부에게는 점차 늘려 왔다.

현재 고용주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는 (도중에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총 9년 8개월까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숙련이 쌓인 일부에게는 그 이상의 장기 체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이주노동자가 단지 ‘저숙련’ 업종에서만 일하는 것도 아니다. 조선업의 일부 공정에서 “이주노동자는 최고의 기량을 가진 숙련 노동자로, ... 유연화된 초국적인 배치노동자(또 다른 이주노동자를 훈련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 내국인 숙련공의 고령화로 ... 숙련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정주화는 조선업의 경쟁력을 지속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다.”(‘이주노동자가 만든 한국 배’, 김현미 외, 2020)

인구 감소로 곤란을 겪던 지역에 이주민이 유입돼 활력을 되찾기도 한다. 특히, 출생률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들자 지방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거는 건 대학이나 인근 상권뿐만이 아니다. 고성군과 인근 속초시의 식당, 젓갈공장, 오징어 건조 공장 등 소규모 사업장들은 유학생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다. (‘전국에서 가장 활기찬 지방대 캠퍼스, 휴전선 바로 밑 고성에 있다’, <한국일보> 2023년 6월 9일자)

이주민의 재정적 기여도 커지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은 2018~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 2조 2742억 원 흑자를 안겼다. 연평균 4548억 원이 넘는다. 노인들의 병원비를 평균 연령이 젊은 집단인 이주민들이 건보료 납부로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민은 한국의 사회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1994년 경실련 농성, 1995년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2003~2004년 단속추방·고용허가제 반대 명동성당 농성 등 인상적이고 전투적인 투쟁을 벌였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며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이끌어 내며 일부 조건 개선과 권리를 쟁취했다.

현재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도 팔레스타인인과 아랍인을 비롯해 이주민·난민은 세계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중요한 존재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며 집회·행진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덕분에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벌써 5개월 넘게 지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민은 한국의 노동운동과 좌파가 환영하고 연대해야 할 존재다.

현재 정부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주민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주민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고 이주민들이 조직하고 정치적 운동에도 나서는 것을 억압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정부의 공격이 관철될수록 한국인 노동자들도 정부와 사용자들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이주민을 환영하고 이주민의 조건 개선과 투쟁을 지지하며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

임준형



이주노동자가 차리는 한국 밥상 충북 괴산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사진: 노동자 연대, 노동자